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도서관

도서관은 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기관이다. 정보매체가 파피루스에서 종이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도서관의 업무는 달라지고 있지만 정보를

수집, 가공, 이용, 보존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업무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클 | 노 우 진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북한대학원대학교 파견)
bada@nanet.go.kr

미국도서관협회는 미국 의회가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자법」(USA PATRIOT Act) 제215조에서 「해외정보감독법」(FISA) 절차에 의해 영장을 제시하면 도서관과 서점에 대해 누가 어떤 도서를 대여하고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즉 협회는 2003년 1월이 조항이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협회차원의 결의안을 내는 등 미국출판협회, 미국서적상협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 규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애국자법」의 개정에서 도서관 기록을 포함한 각종 기록에의 접근을 허용했던 제 215조에 대한 의회와 사법통제를 강화했으며, 행정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발하는 소환장인 국가안보서신에 대해서도 도서관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북한관련자료를 다루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이 올해 7월부터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은 북한자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개방'과 '허용'에서 '제한'과 '관리'로 선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침은 디지털콘텐츠의 세분화, 취급기관의 설립목적별 구분 등 지침의 정교화와 함께 복사불가원칙의 명문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제한, 경고·시정명령을 받은 취급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북한정보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자료의 이용에 있어 상당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의 북한자료의 접근에 협조적이던 사서들의 정보서비스에 냉각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내가 어떤 자료를 보느냐를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한 북한관련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이 대학에서 특수자료를 이용했었는데, 국가정보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대학 자료실에서는 북한 간행물을 복사하겠다는 이용자와 달라진 지침에 의해 그럴수 없다는 사서의 불편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보았다.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 도서관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을 경우 분연히 일어나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특수자료취급기관을 잠재적 실정법규 위반기관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하고 천안함사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 바로 알리기’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에 시민들의 정보획득과 의식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자료에 대한 학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강화하려는 것은 특수자료취급기관에 있는 북한정보 접근을 제한하면 북한정보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북한정보에 대해 알리고 싶은 정보만 알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지나친 보안유지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때 진실과 다른 소문이 자라난다.

보안유지에 대한 실익과 폐해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 북한자료는 누가 이용하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자료를 다루는 정보당국은 이에 접근할 것이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라면 일본이나 인터넷 혹은 직접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지침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은 북한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와 경험을 하는 사업가들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을 연구하려고 한국에 온 외국학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사이트에 접속을 못해 연구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상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 북한 연구 학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나 ‘철학연구’ 같은 디지털로 된 북한 원전을 개인연구실이 아닌 자료실의 열람전용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고 그것도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시계추처럼 좌우로 움직였다. 클린턴 정부가 열린정부를 지향하며 비밀해제를 했다면 부시 정부는 9.11 테러를 맞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대폭 제한하는 비공개 정보정책을 펼쳤다.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제공되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단순히 경제를 살렸다는 것에만 있지 않고 정부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기반으로, 이 자유가 없는 사회는 독선의 사회, 즉 파쇼나 공산주의 사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져 무너지는 생태계를 보면서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해보게 된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견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도서관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을 경우 분연히 일어나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침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는 동안 우리협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